

#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국민의힘 ‘변화·쇄신’ 강조

윤석열 “모든 것 제가 부족한 탓”  
이준석 불참... 사퇴 놓고 의원 갈등  
난상토론 지속에 쇄신 난관 예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과 선대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의원들에게 송구하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 후보와 당도 큰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고,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자신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후보가 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사실 팔다리 끊어내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후보의 절절한 심정이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뛰어야 할 때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6일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사과하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확신한다”고 지원 사격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선대위 변화와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선 이준석 당 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계속돼 선대위 쇄신에 난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준석 당대표 사퇴안 의결’을 둘러싼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의총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대표 행동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 대표

퇴진을 결심할 시기”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당 발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원 자격으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영호 의원이 이 대표 사퇴 결의를 위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승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 결의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협력하면 후보와 손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안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 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후 2시에 의총을 속개해 의견을 더 듣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

며 “어떤 형태로도 오늘 결론을 낼 생각이다. 오후 속개되는 의총에 이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의총에서 사퇴 결의할 수도 있고, 만장일치 혹은 찬반투표로 결의할 수 있다”며 “최근에 당에 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냐고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줘보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공개회의를 전제로 의총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다만 일부 강경의원들 사이에서 비공개라고 하자며 반발 중”이라며 “당 대표 사퇴에 대한 논의는 대국민 차원으로 공개 질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만약,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퇴안을 결의한다고 해도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당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李 “통합정부, 연정과 구분”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눈다는 것  
유능한 인재면 진영 가리지 말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눈다는 것으로,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특정 세력과 특정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정치적 필요에 따름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며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의 누구 씨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재라는 것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좋은 정책이라면 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게 제 입장”이라며 “내가 구성에도 철저히 실무적 입장에서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최대한 진영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이슈가 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 이재명 “전세사기, 반사회적 범죄... 근절”

작년 10월 기준 피해액 2433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세 사기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환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특히 2030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남북관계 개선” 외치는 文... 北 ‘무반응’

임기 동안 개선 가능성 낮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협력 요청에 반년 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북한은 무력도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경제 현장 행보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말한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의식한 듯, 같은 날 무력도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경색한 남북관계 긴장 해소 차원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바람인 북한과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감염병 공동대응) ▲산림(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지만, 답은 없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단절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7월 27일 복원된 ‘성고’가 사실상 전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후보, 개헌입장 밝히길”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며 대선 직후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2년 신년 화상 기자회견에서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라며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견뎌내고 있는 국민과 방역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서도 감사함을 표하면서,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국민 모두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는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다”며 “처리 법안이 4000건이 넘어 20대 국회보다 48%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 ‘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 추진

민주당 혁신위 1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오늘 발표하는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한다.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의 1차 혁신안은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등을 담은 청년혁신안 1탄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핵심이다.

장 위원장은 “당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쇄신’이고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 이익이 된다면 ‘정치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혁신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청년혁신안 1탄으로는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민주당 후보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를 담은 청년정치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정익 기자